

국민안전·일자리 창출 위한 SOC투자 확대 토론회

“인프라 선진국들도 투자 늘리는데… 평균에 만족하는 韓”

(세계2위 싱가포르)

(세계26위)

12일 'SOC 투자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한민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국토부 차관의 사회로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SOC 투자는 국민 안전과 일자리 창출을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상호 건설연 원장
4차 산업혁명 대비
‘최고’ 인프라 강조

“SOC예산 4兆 줄자 건설현장 40% 감소” “인프라도 나이 먹을수록 재투자가 필수”

“시험에서 반 평균(70점)만큼 받아온 자녀에게 앞으로 딱 그만큼만 하라는 격입니다.”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12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가 주최한 ‘국민안전·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OECD 평균 수준에 만족하는 한국의 SOC 투자정책을 빗대어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인프라 질(quality of overall infrastructure)은 OECD 34개국 가운데 14위이고 국가 경쟁력 순위는 26위로 처져 있다.

이 원장은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SOC 투자비율이 2% 미만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일제히 인프라 투자를 늘리는 추세와 반대로 가는 역주행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인프라 국가경쟁력 세계 2위의 싱가포르를 지난해 GDP의 4.4%였던 인프라



12일 서울 노원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국민안전·일자리 창출을 위한 SOC 투자 확대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라 투자예산을 2020년까지 6%대로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은 인프라 투자를 장기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유지·보수 투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SOC 3.0 투자비전’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5대 전략으로 △적정수준 SOC 예산 △기반시설관리기법별 제정 △적정 공사비 △SOC 투자 평가 체계 △민간투자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경부고속도로는 지금 기준으로

타당성조사를 하면 절대 경제성(B/C(1)이 안 나올 것”이라며 “미래투자는 당장의 경제성 외에도 고용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정책 타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주현 건단련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SOC 인프라 투자야말로 일자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의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이라며 “적정 수준의 SOC 투자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kth@

노승만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 연구원 이름이 처음엔 ‘강원개발연구원’이었다. 그러다 ‘강원발전연구원’으로 바뀌었고, 다시 ‘강원연구원’이 됐다.

‘개발, 발전’이란 말을 쓰면 구시대 사람 취급을 받는다.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자꾸 그런 프레임을 씌운다. 서울과 양양을 잇는 동서고속도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건설을 반대했다. 이들을 설득할 때

한 얘기가 있다. 강원지역 고속도로 노선 인근에만 초등학교 12개가 있다. 인도가 없는 위험한 도로를 당신 자식들이 매일 걸어다닌다고 생각해보라고 했다. 반대 목소리가 푹 끊겼다. 정부가 해마다 7.3%씩 SOC 예산을 줄이면 강원지역 체감도는 -30% 이상이다. 평창동계올림픽 때 강원도에 1000여억원을 들여 12개 경기장을 지었는데, 지금은 200억원 들여 철거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대변해 준다.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 군시설 공사 표준품셈 '정부지침 수준'으로 현실화

지역건설사 '경영 숨통' 트이나

건협 강원도회 요구 받아들여져
업계, 軍 공사 매출비중 10~15%
단가 조정되면 수익성 개선 전망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이 군시설공사 관련 표준품셈을 정부 지침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강원시설단 발주 물량의 70~80%를 소화하는 지역건설사들이 이번 결정으로 경영상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12일 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은 앞으로 강원지역 시설공사 발주 과정에서 집행되는 표준품셈 단위 단가를 정부 지정 수준까지 현실화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자재비·노무비·장비비가 설비·일반경비 등 1430개 항목으로 나뉘어 정부 고시가격에 따라 산출된다. 표준품셈은 이때 적용되는 정부 고시가격을 의미한다.

현재 군 시설공사 현장에는 정부가 정하는 표준품셈을 적용하지 않는 곳이다 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동일 공사종류 또는 내용임에도 발주 시마다 적용과정에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 건설업계 관계자는 "군 시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면 외진 곳, 산악지형 등의 단가 할증요인이 많음에도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설령 적용되더라도 다른 기관의 동일 내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회장은 최근 김남우 국방시설본부 강원 시설단장을 만나 이 같은 문제점을 전하



건협 강원도회 군시설 관련 요청 사항

공사비 부담삭감 자제
재료비 단가 현실에 맞게 조정
제 경비, 법정요율에 맞게 현실화
소량구조물 산재 시 50%까지 품의 할증
표준품셈 단위 단가가 반영된 예정가격 산정

고,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는 것을 자제하고 재료비 단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며 "표준품셈 단위 단가가 반영된 예정가격을 산정해 제경비를 법정요율에 맞게 현실화하면서 업계의 적정 이윤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강원시설단과 간담회를 5년 정도 진행하면서 부대 사정도 있겠지만, 예전보다 많이 개선된 상황"이라며 "시설단에서도 '공사비 책정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부 지침 수준과 같게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강원도는 건설경기 위축에 따른

도미노 현상으로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지만, 대규모 건설사업은 진입 문턱이 높아 지역 건설사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SOC 물량의 감소로 업계는 극심한 수주난을 겪고 있다.

도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단지 조성, 고속도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등 발주 규모 1000억원 이상 사업은 회원사인 지역 건설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렵다. 이에 군부대 시설공사 단가가 현실화되면 도 건설업체들의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도 업체들의 군부대 공사 관련 매출 비중은 평균 10~15%를 차지하고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서 발주하는 관련 공사의 70~80% 이상이 도 지역업체를 통해 소화된다.

건설근로자의 민간인통제구역(민통선) 출입제한 시간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장된다. 현재 강원시설단은 사고방지 및 인원 보호를 목적으로 민통선 내 출입제한 시간을 오후 6시까지 적용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일조시간에 따른 작업량 증가로 출입제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작업여건으로 공사 참여 인력의 군부대 시설 공사 기피현상이 생겨 건설업체들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협회 강원도회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강원 시설단에서도 전방 감시초소 등 군사경비 시설을 제외한 강원도 후방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성엽기자 starleaf@